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

김윤철 (金煥喆) 전 노무현대통령당선자 과학기술특보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성공한, 많지 않은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국민들의 교육, 노력 그리고 뛰어난 진취성이 크게 공헌한 때문이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여 '다음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요즘의 화두(話頭)이다. 기술대국 일본, 비약하는 중국, 잠재력 큰 러시아, 그리고 세계 최강의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이며, 1인당 GNP 1만달러 이후, 어떤 산업으로 GNP를 2만달러, 3만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묻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운 국가목표인 동북아 중심국가의 전략은 무엇이고,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요체는 무엇이냐고 질문한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슬기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보산업에서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점

우리나라는 1970년대초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은 정보산업으로 변천, 발전을 하였고, 이제는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점에 있다. 국가적 산업전략은 기존산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위에 기술발전의 순서와 국민의 교육, 기술, 자원, 국제여건을 고려하여 새 산업을 시의성(時宜性)에 맞춰 추진하여 GDP를 쌓아올리는 것이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실은, 앨리스 암스덴(Alice Amsden)같은 석학들은 중화학, 조선, 자동차, 전자 공업등 하나같이 정부에서 선도하였고 민간이 집행하

는 형식의 관·민 공동의 마이크로 경제정책이 주효했다고 판단한다. 어설픈 시장경제론에 끌려가다 보면, 작은 국가의 약소경제로서는 국제적 경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선진국의 거대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세계 부(富)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하루에 1조(兆)달러 단위의 돈을 움직이며, WTO와 지적소유권을 무기로 세계를 자기마당으로 하여 뛰고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연간 기술개발 홍보비만도 380억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 어깨를 겨누어 경쟁을 하고 또 이겨야 하는 것이다.

부의 개념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었다. 중화학공업은 시설투자가 70%이상을 차지하고 기술적 가치가 10~15%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술의 가치가 70%가 되는 산업사회가 온 것이다. 우리에게도 빌 게이츠(Bill Gates)같은 부자가 나와야 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또한 삶의 질을 훨씬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돈버는 것 말고 환경,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새로이 중요도를 갖기 시작하였다. '잘 살아 보세'에서 '즐기면서 살아 보세'로 세상이 바뀌었다.

과학기술 중심 「산업구조개편론」 세울때

새로운 지식과 지식인을 활용하는 과학기술중심의 「산업구조개편론」 및 「사회구조개편론」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국가목표에는 사람·기술·산업·금융·경제·사회·국가경영의 고리가 있고, 이 고리내용이 하나하나 충실하고 전체가 잘 연계되도록 시스템이 움직여져야 한다. 경제적

문제든, 사회적 문제든 일이 시작되도록 하는 발기(發起)단계와 일이 형성되는 단계의 지원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와 같은 자원이 거의 없는, 개도국에서 겨우 벗어난 나라에서는, 이것은 국가의 몫이 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긴 시차(時差)와 관·민 협조가 요구됨으로 국가 최고 차원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중심 사회의 핵심은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지금 국가기술지도(NTRM)가 준비되고 있다. 이것을 본태적(本態的) 시각에서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얼마만한 노력을, 특히 사람과 돈을 투자하면 어떤 경제 사회적 효과가 언제쯤 나오느냐는 내용과 가치판단이 선정과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선후경중(先後輕重),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계는 이것이 차질없이 잘 결정되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 도출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과학기술계는 우리 국가의 원수가 동북아 중심국가 운영을 국가목표로 결정했으면 가장 빨리 목표달성에 이르도록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는 세계인들, 특히 미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공동협력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동북아의 중심에 서 있고 정서적으로도

동양과 서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양쪽을 결합시킬 수 있는 적합한 나라이다. 구체적으로는 범국가적으로 기계류 부품소재 산업등 중소기업을 더욱 육성하여 동북아 여러나라에 진출함으로써 동북아 중심국 전략의 핵심을 창출해야 한다. 또 새 정권의 목표로 제기된 것들, 즉 지방화, 농촌 소득 보장,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화 컨텐츠사업 등에 과학기술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만여개의 민간연구기관과 10만여개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를, 20여개의 국가과학기술연구기관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지도 찾아내야 한다. 실업중인 2천여 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일자리도 찾아주어야 한다. 국가의 기본과제인 에너지, 식량, 안보, 환경 등과 노령화사회, 복지, 고용, 여성인력 활용 등 사회적 수요도 충족시켜야 한다.

IT, BT, NT 등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와 인력양성, 기초 과학 육성을 균형과 집중을 동시에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두 과학기술자들의 몫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국정목표 네 번째로 채택하고 TF팀과 정보·과학 보좌관을 청와대에 둔 것은 과학기술자들에게 이 과제를 혼신의 힘을 다하여 풀어 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중추공항 역할을 기대하며 지난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